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깨끗한 마음을 주고 받는 사회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깨끗한 마음을 주고 받는 사회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Contents

1. 제정배경(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	2	[부록]	
2.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	3	1.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요약	30
❶ 누가누가 포함되나요?	3	2. 도표로 보는 청탁금지법	31
❷ 부정청탁 금지 알아보기	4		
❸ 금품등 수수 금지 알아보기	6		
❹ 신고 및 처리절차	8		
❺ 신고자 보호·보상 알아보기	9		
3. 이런 사례 정도는 꼭 읽어보자!	10		
❶ 부정청탁 적용사례	10		
❷ 금품수수 사례	17		
4. 그렇다면 우리는?	24		
❶ 우리의 대응자세	24		
❷ 이럴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25		



1

재정배경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

재정 배경

▼ 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곧 부정의 시작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사후제재하여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의 수수가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밖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 '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 (OECD 34개국 중 27위)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저해를 가져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확률이 15% 낮음(뇌물척결보고서 OECD 사무국, '16. 5월)

안으로 국민신뢰를 높이고 밖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규범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정되는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

1 누가누가 포함되나요?

▼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죠?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 금지 알아보기

■ 무엇이 부정청탁이고 무엇은 아닌가요?

이런 행위는 안되죠(15개)

- ❶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❷ 불법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❸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❹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❺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❻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❼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개입
- ❽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개입
- ❾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❿ 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개입·조작
- ⓫ 불법적인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⓬ 공공기관이 실시한 각종 평가·판정 개입
- ⓭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묵인
- ⓮ 수사·재판·심판 등에 개입
- ⓯ 제1호~제14호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을 벗어난 월권행위

이런 행위는 괜찮습니다(7개)

- ❶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❷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❸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 민원 전달 등
- ❹ 법정기한내 업무처리 요구 등
- ❺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❻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❼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부정청탁 시 처벌은 어떻게 되죠?

행위유형	민간인	공직자등
자신을 위하여 직접 청탁	제재 없음	징계
제3자 통하여 청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 위하여 청탁	2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 직무수행	해당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 청탁



민간인 → 제재없음
공직자등 → 징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 3자 청탁



민간인·공직자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민간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알아보기

■ 이런 금품등 수수 행위는 금지됩니다!

-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 수수
-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이런 금품등(8가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군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 ①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③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④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⑤ 각종 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⑥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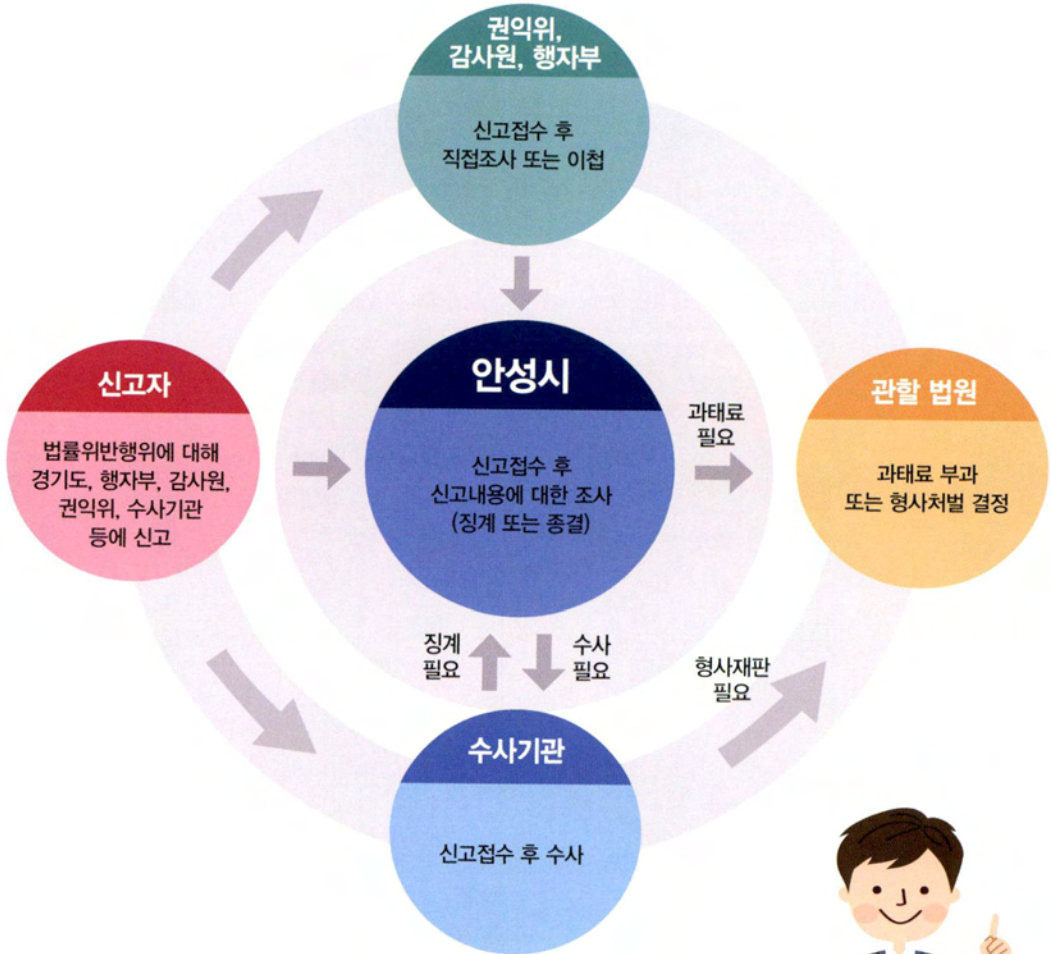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금품 수수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준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나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요!



4 신고 및 처리절차



※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 등을 적은 문서에 서명하시고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등을 마친 후 결과를 알려드려요!



5 신고자 보호 · 보상 알아보기

신고자 보호장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책임감면

신고자 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 증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

보상금
지급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신변보호는 가능한가요?

그럼요..
비밀보장 가능합니다!



3

이런 사례 정도는 꼭 읽어보자!

1 부정청탁 사례



지금부터 대표적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이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시다.

유형	민간인이 직접 청탁
궁금증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 담당공무원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직접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제재 받지 않구요,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제3자(일반인)를 통하여 청탁
궁금증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제3자를 통해 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친구인 회사원 B(제3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렇다면 왜 제3자의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가 더 무거울까요?

- 우리사회는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탁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원인이 됩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를 더 무겁게 제재하는 것이죠.

유형	제3자(공직자등)를 통하여 청탁
궁금증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시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제3자를 통해 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친구인 ○○시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제3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위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등이 민간인보다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가 더 무거운 이유는 다들 아시죠?

- 공직자등은 민간인보다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게 되니 공직자 분들은 명심하세요!

유형	동일한 부정청탁
궁금증	•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 담당공무원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을 열심히 숙지한 C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 A는 다시 ○○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제3자를 통해 청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구요, 공무원 D(제3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담당공무원 C는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서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 에게 신고했으면 처벌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징계대상 이 됩니다. (물론 위법한 허가를 내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유와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까요?

-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그리고 '동일한 부정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인이 청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동일 하면 동일한 부정청탁으로 보니까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이번에는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개별 사례를 살펴볼까요?

유형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궁금증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하는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일단 아들 A는 청탁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만약 아들 A가 청탁을 부탁했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죠.) 민간인인 B의 경우 제3자인 아들을 위해 청탁하였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구요, 병무청 간부 D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 C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처분감경을 위한 부정청탁
궁금증	○○시청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도립의료원 의사 A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중앙부처 의료분야 담당 과장 C에게 감경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A몰래 청탁한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의 경우 부정청탁 한 사실 없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고위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담당과장 C의 경우 처분을 감경해 준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인사 부정청탁
궁금증	○○시청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의 경우 부정청탁 한 사실 몰랐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소속 국장 B 는 제3자인 A를 위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사과장 C 의 경우 점수를 높게 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
궁금증	○○시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공무원 A는 이해 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징계대상 입니다. 시장 B 의 경우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 이 됩니다. 한 편, 평정권자 C 는 B의 지시에 따라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결재선상에는 없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은 직무를 수행 하는 공직자 등으로 보니 유의하세요!

유형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궁금증	관내 건설업자 A는 ○○공사 발주 내부 검토자료의 입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시청직원 B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시청직원 B는 담당직원 C에게 자료 제공을 부탁하였으나 담당직원 C가 거절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건설사업자 A는 제3자인 시청직원 B 를 통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인 시청직원 B 는 A를 위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한 편, 담당직원 C 는 청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다만,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유형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궁금증	건설업자 A는 ○○시청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업자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업자 A가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분할 수의계약 청탁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건설업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청 공무원 B는 A를 위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마지막으로 계약담당공무원 C 는 부정청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보조금 부정청탁
궁금증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는 제3자인 시의회 의원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의회 의원 B는 A를 위해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업무 담당자 C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의회 의원B는 선출직 공직자인데 그렇다면 위 행위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아 처벌사유로 볼 수 없지 않나요?

- 아닙니다. 지방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형	취업 관련 부정청탁
궁금증	○○시청에서 지난 연말 4급 일반직 공무원(국장)으로 정년퇴직 한 A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방송에 취업하고자 하였음. A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방송 인사담당 국장 C에게 취업 청탁 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는 친구 B를 통해 취업승인 없이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기자인 친구 B와 방송사 인사담당 국장은 공직자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각 과태료(3천만원 이하)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 봅시다.

유형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궁금증	민원인 A는 건물 증축을 위해 ○○시청에 증축허가를 업무담당 공무원 C에게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시청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음. 그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시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민원인 A가 공무원 B에게 부탁한 사항은 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당한 확인절차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피켓팅 시위 역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형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궁금증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C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해답	국회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3자인 A의 고충민원 또는 제도 제안사항을 전달하였으므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금품수수 사례



이번에는 금품등 수수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 보시다.

유형	회계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증	○○시청에서 지방소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함께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A와 세무사 B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1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증	○○도시공사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안성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관성 있는 일련의 식사등 대접은 1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의 식사와 술자리는 1회의 접대로 볼 수 있고, 평등하게 분할 하였을 때 1인당 120만 원에 상당하기 때문에 A, B, C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할 경우
궁금증	○○시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주)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금품등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출처가 동일하다면 동일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건설회사 소속 임직원 B, C, D의 접대는 △△건설회사(주)의 단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 A는 총 1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셈이므로 A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B, C, D는 각자 제공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주)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B, C, D 각각의 제공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유형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미만 수수
궁금증	○○시청 국장인 A는 작년 5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동창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같은 해 7월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는데, A와 B는 아무런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법 위반 인가요?
해답	국장 A와 대학동창 B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볼 수 없고, 5월 접대와 7월 선물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회라고 판단할 수 어려우며, 두 번 모두 100만원 미만의 금품등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형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미만 수수
궁금증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답	A, B, C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고, 식사값을 평등하게 분할했을 때, 20만원이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유형	공익적 사용, 100만원 초과 수수
궁금증	○○시청 건설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주라고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는 B와 직무관련성이 없음)
해답	금품등의 수수는 사용용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 즉,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격려금 역시 100만원을 초과해서 수수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직무관련성 있고, 100만원 미만 수수
궁금증	○○시청 위생과 공무원 A는 해당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B로부터 작년 9월 초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9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았고, 10월 초 1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10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위생과 공무원 A와 요식업자 B는 위생과 공무원 A의 관할구역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수수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유형	직무관련성 있고, 5만원 미만 선물
궁금증	○○시 공직유관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추석 명절 전 공직유관단체 팀장 B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자택으로 과일선물 세트를 받았다. 공무원 A는 선물을 돌려보내려고 B팀장에게 연락을 하니 B팀장은 평소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며 가격 또한 4만 9천원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처벌 되나요?
해답	5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됩니다. (수수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유형	공식적 행사에서 특정인에게만 제공
궁금증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시청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해답	태블릿 PC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므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수수금액 2배~5배 과태료)

유형	친족이 제공하는 물품
궁금증	○○시청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었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해답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고,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장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금품등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유형	추첨을 통해 받은 물품
궁금증	○○시청 공무원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 마트 ○○점을 방문하였는데,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최신 텔레비전에 당첨되어 수령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답	시청 공무원 A가 받은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이므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	기준초과 금품 제공
궁금증	초등학교 동창회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시청 고위공무원 A의 자녀결혼시에는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해답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
궁금증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해답	대기업 직원 B와 사무관 A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다소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닙니다.



사회상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유형	수수금액의 반환
궁금증	시청 직원A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친구로부터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액범위(1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건가요?
해답	안됩니다. 시청 직원 A는 받은 축의금 전액(20만원) 반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뿐만 아니라 모든 금품등 수수 영역에서 수수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유형	경조사의 범위
궁금증	○○시청 공무원 A는 자신의 자녀의 돌잔치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업체 대표B로부터 10만원을 받았을 경우, 경조사비 가액범위 내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나요?
해답	안됩니다.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본인 및 직계비속)과 장례(본인과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	경조사에서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 대접
궁금증	○○시청 공무원 A의 결혼식에서 참석한 하객에게 가액범위(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이 가능한가요?
해답	가능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혼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인만 추가적인 선물이나 별도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형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궁금증	○○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 수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이 됩니다.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궁금증	○○시청 ○○과 식품위생 관련 과장(5급) A는 음식점협회로부터 1시간 30분의 법정위생교육 의뢰를 받고 출강하였다. A과장은 출강 전 출장 결재를 득하였으나, 외부강의 사전신고는 누락한 채 강의 종료 후 협회로부터 40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답	A는 국가나 지자체로의 출강이 아닌 외부강의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은 20만원이고, 추가 사례 기준인 1시간 초과 시 상한액의 1/2한도 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수령 가능한 금액은 30만원 이므로 초과 수령 하였기 때문에 A과장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외부강의시 시간당 직급별 지급기준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시간당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 00과장님이 2시간 강의 한 경우, 30만원(20+10)을 넘는 사례금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우리는?

1 우리의 대응자세

우리의 대응자세

부정청탁

부정청탁은 요구 하지도 말고, 실행하지도 말자.

➡ **정당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금품등 수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 **더치 페이 하자, 받지 말자**

2 이럴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를 제안받았다면?

상황

"팀장님! 12시가 넘었네요. 점심식사 저희랑 함께 하시고 그 이후 금번공사 설계용역
과업관련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행동요령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6. 9. 28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양쪽 다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각자 더치페이로 비용처리 하는게 깔끔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 동의하셨으면 식사하러 가시죠.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 제3자가 미리 계산했을 경우?

상황

"친구야! 후배(감정평가사)가 오늘 저녁먹은거 계산했으니까 넌 그냥 가면 되 신경쓸 필요없어
공무원이 무슨돈이 있겠니?"

행동요령

사장님! 저희먹은거 총 얼마예요?
9만원이면 제가 먹은거는 3만원이네요. 죄송하지만 카드 결제영수증 취소해주시고 제가 먹은거
3만원 별도로 영수증 발행해주세요.
친구야, 예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이젠 청탁금지법이 생겨서 원활한 직무수행이외는 안되고 그 기준
적용이 애매해서 각자 더치페이 하자고.

※ 금품등 받았을 경우 자체없이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한 인사청탁(재차 동일한 청탁)을 받은 경우?

상황

"팀장님! 금번 공무원시험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거 맞으시죠 제 친구가 필기시험 합격했는데요 면접시험만 남아서요 이번응시가 세 번째라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행동요령

후배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모르나, 그리고 잘 알겠지만 금번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또한 처벌대상이야! 친구한테 면접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해주는게 나을 듯 싶어.

: 1회 거절

상황 (재차 동일한 청탁)

"팀장님! 이번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면접만 잘 통과되면 아들 노릇도 하고 앞으로 병원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요령

이보게, 그 친구의 딱한 사정을 이해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까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걸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네.

(이것참...재차 동일한 부탁을 받았으니 어쩔수 없이 신고해야겠지만, 일단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신고서를 작성해야지) : 2회시 신고의무 발생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이미 택배로 받은 경우(보낸 사람을 알 경우)

상황

"선배님! 금번 인사 승진 축하겸 해서 약소하지만 골프운동화 한 켤레 택배로 보냈고요. 앞으로 여유되시면 저도 좀 챙겨주세요."

행동요령

A: 이보게 승진축하 해주어서 고맙긴 한데, 자넨 뉴스도 안보내! 앞으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니까 우리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자고, 자네집으로 반송할터이니 그리알고 어쨌든 마음만 받을게 고마우이~

(잠시후)

A: 아, 그런데 그냥 반송해도 될까?

불안하니까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031-678-2111~2113,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로 문의해봐야겠군.

(전화)

B: 네, 감사법무담당관실입니다.

A: 수고하십니다. 제가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후배한테 선물 택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 받으신 물건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아 그렇군요, 난감했는데 감사합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에서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이미 택배로 받은 경우(보낸 사람을 모를 경우)

상황

"여보! 당신한테 추천 선물로 사과 선물이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안적혀 있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행동요령

A: 받으면 안되지! 이를 어찌지...아, 저번에 한과장도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를 이용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로 전화 해봐야겠군

(전화)

B: 네, 감사법무담당관실입니다.

A: 수고하십니다. 제가 선물 택배를 받았는데 발송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 받으신 물건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아 그렇군요, 난감했는데 감사합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동강령 절차에 따라 공고 후 세입조치

※ 변질 등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선정 제공(즉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축의금 받은 경우

상황

"과장님!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찾아뵙야 하는데 가족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 좀 여유있게 축의금(20만원) 인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행동요령

이사람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축의금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네.

자네는 나와 직무관련자이지 않나. 다시 돌려줄테니 그리알게.

※ 금품등을 받은 경우 수수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로 신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승진 축하 화환 등 받은 경우

상황

"국장님! 승진 축하겸 해서 화환이랑 축하떡 좀 보냈고요 좀 한가해 지시면 저녁이나 한끼 하시죠."

행동요령

'16. 9. 28부터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에 따라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받을수 없네, 다시 돌려줄테니 그리 알게나, 마음만 고맙게 받겠네. (청탁금지법상담콜센터로 신고 후 반환조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콘도 회원권은 받아도 될까?

상황

"감독관님! 금번 하계휴가시 숙박장소 마땅치 않으시면 저희 법인콘도 회원권 이용하셔도 괜찮거든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행동요령

말씀 감사한데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연관성 적용가능성이 커져서 서로 피해를 볼수있어요. 그리고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니까 나중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 수수금지 금품등의 제공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 지체없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록1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요약

목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국민신뢰 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 부정청탁 금지 행위유형 - 15개(제5조 제1항)
- 부정청탁 금지 예외유형 - 7개(제5조 제2항)
- 금품등의 수수금지 적용대상 - (제8조 제1,2항)
-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유형 - 8개(제8조 제3항)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제10조)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영 제2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제7조)
 -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확인, 신고의 처리 등(영 제3~5조)
-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9조)
 - 신고방법, 신고에 대한 조치 등(영 제18조·19조)
- 위반행위 신고 등 - (제13조)
 - 위반행위신고, 신고에 대한 확인, 신고에 대한 조치 등(영 제29~31조)

보호·보상 등

-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제15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영 제40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징계 및 벌칙(제21~22조)
 - 징계기준(영 제43조)
- 과태료 부과(제23조)



부록2 도표로 보는 청탁금지법

분야별 처벌기준(원칙)

구분	행위주체	유형	제재 수준
부정 청탁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No 제재 없음 (공직자 등은 징계)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Yes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3자	사인 (私人)	Yes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공직자 등	Yes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공직자 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Yes 과태료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대상자	직무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금품등 수수한도 (동일인 기준)	제재 대상	처벌기준
금품등	공직자 등 (배우자 포함)	Yes	Yes	금액불문	Yes	뇌물죄
		Yes	No	1백만원 이하	Yes	과태료 (수수금액의 2배~5배)
				기준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Yes	과태료 (500만원 이하)
		No	No	1회 1백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Yes	과태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예외적 허용 금품수수* 기준가액 미준수 시 처벌기준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

구분	대상자	직무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금품등 수수한도 (동일인 기준)	제재 대상	처벌기준
음식물 (식사)	공직자 등 (배우자 포함)	Yes	Yes	3만원 이하	Yes	뇌물죄 (과태료)
		Yes	No	3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한함)	No	제재없음
				3만원 초과 1백만원 이하	Yes	과태료 (수수금액의 2배~5배)
		No	No	1회 1백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Yes	과태료 (3천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대상자	직무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금품등 수수한도 (동일인 기준)	제재 대상	처벌기준
선물	공직자 등 (배우자 포함)	Yes	Yes	5만원 이하	Yes	뇌물죄 (과태료)
		Yes	No	5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한함)	No	제재없음
				5만원 초과 1백만원 이하	Yes	과태료 (수수금액의 2배~5배)
		No	No	1회 1백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Yes	과태료 (3천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대상자	직무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금품등 수수한도 (동일인 기준)	제재 대상	처벌기준
경조사	공직자 등 (배우자 포함)	Yes	Yes	10만원 이하	Yes	뇌물죄 (과태료)
		Yes	No	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한함)	No	제재없음
				10만원 초과 1백만원 이하	Yes	과태료 (수수금액의 2배~5배)
		No	No	1회 1백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Yes	과태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봉산동 31-3)
25 Sicheong-gil, Anseong-si, Gyeonggi-do, 17586, Korea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TEL : 031)678-2111~3
www.anseong.go.kr
